

데스크 시국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지난 4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5선)이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에 선출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이제 우리 정치도 승자독식 패자전멸의 폐습과 결별할 때가 됐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다. 사회적 공감대도 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사회적 합의의 바탕으로 21대 국회 입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시대정신 답아야

김 의장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제 정치권이 보다 진지하게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이 개정된 지 35년,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흐름이다.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통해 '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

은펜칼럼



한국환
경영학 박사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투표율(50.9%)은 저조했으나 민심은 확실히 여당에 있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을 3·9 대선 승리의 '컨벤션 효과'에 힘입어 중앙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압승하였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수요에 따른 공급 대책보다 자유시장 메커니즘에 적극 개입하여 수차례 내놓은 대책마다 실패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때를 놓친 개혁 입법에 매몰돼 민심을 얻지 못하여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택 받지 못한에 대한 겸허한 반성·성찰보다 계파 간 갈등으로 자중지란에 빠져 향후의 길이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선거에 승리한 국민의힘도 당 대표와 지도부 간의 내홍이 길어져 아주 불행사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소위 '검찰 공화국'을 지향하고 있어 심히 염려스럽다. 청와대와 행정부의 요직에 검사 출신을 중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 인사" "능력에 따른 인선"이라며 '자기 방식'(My way)을 고집한다. 즉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의 인재풀에서 발탁하여 국

기고



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전남대 객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도어스테핑'(Doorstepping: 약식 기자회견)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취임식 다음 날인 5월 11일 용산 집무실 로비에 모인 기자들이 '첫 출근인데 한 말씀 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답변한 것이 시작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기자회견을 꺼리고,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질문을 미리 받거나 질문의 수를 제한하던 것과 비교하면 파격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나 의견을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돌아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지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임하는 것일까? 윤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된 일이 자주 있다. 지난 달 8일 한 기자의 '새 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이 전진 배치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과거에는 '민법' 출신들이

개헌의 시간

회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다.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둔 헌법이다. 하지만 승자독식 구도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심각하다. 정치를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당장, 5년마다 치러지는 대선은 여야가 생사를 걸고 싸우는 '전쟁판'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1987년 이후 치러진 일곱 차례의 대선에서 정권을 지키려는 진영과 빼앗으려는 진영의 전면전은 이념과 지역을 넘어 세대와 남녀 갈등의 확산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20대 대선은 그 절정을 이뤘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반에 못 미치는 48.56%의 득표율을 얻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47.83%)를 0.73%포인트 차이로 제치며 역대 최소 격차의 승리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극적인 승리의 이면에는 정확히 반으로 쪼개진 민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국정 전반에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가적 동력을 잠먹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지금까지 모든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개헌에 공감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권력구조 개편에 맞물린 정치적 이해관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는 정치권이 개헌을 국가 발전과 사회 개혁을 위한 시대적 요구로 보지 않고 정권 획득을 위한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헌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곧바로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제를 발전·안정시켜야 할 시기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개설해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은 새 정부의 힘을 빼자는 것"이라며 반

중앙·지방 권력 모두 교체한 민심

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 발표한 국정운영에 대한 조사(6월 첫째 주, 6월 다섯째 주 비교)에서 국정 평가는 53%에서 43%로, 부정 평가는 34%에서 42%로 나타나 데드크로스를 걱정해야 하는 성적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 분권' '녹색 성장' '자원 외교' '창조 경제', '한반도 평화' '검찰 개혁' 등 핵심적 추진 개혁 의제와 방향이 분명했지만 윤 정부는 대표할 정책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 정책 제시보다 경쟁 장악과 파워 게임에 몰두하는 형국인데, 여권 일각에서는 외교보다 오히려 내치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UN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자신들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최고를 기록하였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며 사회적 양극화가 아주 심각한 실정이다. 사실 지난해 우리의 GDP는 세계 10위(1조 8천억 달러), 1인당 GDP는 세계 26위(3만 3866 달러)지만, 삶의 질 순위는 세계 46위로 나타났다. 경제지수치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정신적 삶의 영역에서는 채워갈 부분이 많다는 뜻이다. 정치는 집단 간의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종합 예술이며 대통령은 그 총감독이다.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은 크게 대내적으로 경제 분야, 대외적으로 외교·안보 분야를 짚을 수 있다. 21세기 미·중의 세계 패권 다툼으로 한층 첨예한 신냉전 시대는 영원한 우방이 없는 국가 간 치열한 전쟁이다. 또한 경쟁적인 표준 경쟁

정치인과 '말'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대답해 뒷말이 무성했다. 6월 21일에는 고분기와 가계부채 심화 해법을 묻자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24일에는 전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발표를 두고 "내가 보고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언이라고 볼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과거에 했던 일을 지금 반복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논리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장관이 발표한 것을 대통령이 부정하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기자를 대하는 태도도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젊은 기자들에게 친근함을 드러내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질문이 없나 보지? 오늘은?" "어디서부터 할까?" 하는 반말투를 부정적으로 볼 사람도 없지 않았다. 물론 내막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논란이 된 말들을 실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치인들은 실언으로 비칠 말을 일부러 하기도 한다. 그래서 더욱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발언의 정치적 효과를 정교하게 계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대통령의 말은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사람들은 온갖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 발언을 해석한다. 어떤 단어를 썼느냐 하나라도 의미를 다르게 읽는다. 어떤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요 해석이 덧붙게 된다. 모든 말은 짧은 길든,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스피치의 성패는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느냐에 달려 있다. 말하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말이나 축

발, 개헌 논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러한 정치적 선택으로는 여야의 개헌 합의는 백년 하청(百年河清)이 될 수밖에 없다. 개헌은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 국가 대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를 허물고 타협과 협치를 위한 개헌, 사회적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를 위한 치밀한 밑그림을 담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물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의 당위성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넘어서야 할 벽이다.

여야 정치권, 미래 위한 결단을

이런 가운데 개헌의 걸림돌이었던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만큼 국가와 국민, 미래를 위한 정치권의 결단만이 남았다는 지적이다. 시간도 넉넉하다. 연말까지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1년 동안 충분히 논의, 내후년 초에 개헌안을 발의한 뒤,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코로나19가 극복되고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국면은 개헌의 극적인 효과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개헌의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 체제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막혀있던 개헌의 물꼬를 트게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과 함께 협치와 통합, 미래로 가는 지름길인 '개헌'의 문을 열어가는 시대적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골든타임 놓치는 뇌졸중 환자 전국의 두 배라니

광주·전남 지역 뇌졸중 환자 열 명 가운데 네 명이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치료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대한뇌졸중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발생한 뇌졸중 환자의 20%는 첫 번째 방문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24시간 이내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전연(轉院) 환자의 비율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제주도는 9.6%로 가장 낮은 반면 전남은 44.6%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광주도 34.5%로 인천(14.1%)·서울(15.6%)·경기(16.4%) 등 수도권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광주·전남 뇌졸중 환자들의 전연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환자에게 혈전용해제를 사용해 혈전을 녹이거나 기구를 뇌혈관에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이 가능한 뇌졸중 전문 치료센터가 부족한 탓이다. 뇌졸중 치료센터는 수도권에 40곳, 대구·경북권 일곱 곳, 부산·경남권에

열 곳이 있지만 광주·전남권에는 단 두 곳(전남대·조선대 병원)밖에 없는 실정이다. 뇌졸중 치료에는 골든 타임이 가장 중요한데 통상 3~6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한때 전남에는 전문 치료센터가 단 한 곳도 없어 환자들은 증상 발생 시 지역 종합병원에서 1차 응급 처치를 받은 뒤 광주로 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020년 뇌혈관 질환 사망률도 전남이 22.5%로 도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일본이초가 급한 생사의 기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졸중 환자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것이다. 특히 뇌졸중 환자 대대수가 고령 환자임을 감안하면 전남 등 고령화 해를 사용해 혈전을 녹이거나 기구를 뇌혈관에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이 가능한 뇌졸중 전문 치료센터가 부족한 탓이다. 뇌졸중 치료센터는 수도권에 40곳, 대구·경북권 일곱 곳, 부산·경남권에

‘고유가 편승 폭리’ 주유업계 고통 분담해야

유가가 연일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2100원대로 진입한 유가는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버스·화물트럭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자동차를 두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었다. 그제 (사)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한 달 새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 당 124.64원 인상됐다. 같은 기간 동안 국제 휘발유 가격은 l 당 34.78원 올랐다. 국내 주유소들이 국제 유가 인상분 대비 l 당 89.86원을 더 받은 것이다. 정부는 고유가를 잡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했지만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Opinet)을 보면 광주 전체 주유소의 14.3%(37곳), 전남은

30.5%(254곳)가 전국 평균 인상분보다 더 비싸게 휘발유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많은 주유소들이 이를 즉각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원유를 수입해 주유소에 공급하기까지 2주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내 정유 4개 업체는 고유가에 힘입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막대한 영업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만큼 정유업계는 유가 출고가 인하 등으로 고유가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주유업체 역시 이러한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현재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원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광주 시장과 전남지사를 비롯한 29개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난 1일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들은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삶의 비전과 희망 등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보다 앞서 버리와 부정에 결탁되지 않고 공평정대한 행정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도리도 지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제 임기가 막 시작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조선시대 대표 실학자인단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핵심 교훈을 꼭 짚어 봤으면 한다. 목민심서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목민관(牧民官)들이 지켜야 할 지침서로 꼽힌다. 목민관은 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벼슬아치라는 뜻으로, 고을의 원(員)이나 수령 등의 외직 문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지금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 공무원들이 이에 해당된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사람들이다. 목민심서가 주는 핵심 교훈이 많지만, 우선 강조되는 것은 목민관의 청렴이다. 청렴의 비결로 '모든 재물과 직위에 청렴

하면 어디에서든 아무런 문제가 생길 것이 없다. 청렴으로 밝아지고 위엄을 세우며, 청렴으로 강직하면 모든 백성이 존경한다'는 내용이 있다. 지방 권력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버리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도리도 지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제 임기가 막 시작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조선시대 대표 실학자인단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핵심 교훈을 꼭 짚어 봤으면 한다. 목민심서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목민관(牧民官)들이 지켜야 할 지침서로 꼽힌다. 목민관은 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벼슬아치라는 뜻으로, 고을의 원(員)이나 수령 등의 외직 문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지금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 공무원들이 이에 해당된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사람들이다. 목민심서가 주는 핵심 교훈이 많지만, 우선 강조되는 것은 목민관의 청렴이다. 청렴의 비결로 '모든 재물과 직위에 청렴

목민관(牧民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청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